

# 농식품산업 일자리 해소 전담기관 개소

### '전북 농식품 고용혁신 사업단' 출범... 고용노동부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의 체계적 사업 추진 위해 설립

전북자치도는 2일 전북 농식품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전북 농식품 고용혁신 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단은 전북 지역의 농식품산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고용노동부의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전북자치도는 2일 전북 농식품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전북 농식품 고용혁신 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타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을 지역 산업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정책적 빈틈을 메우고 정책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장형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역협력과장,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용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송혁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부장, 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장형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역협력과장, 공용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송혁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사업단은 앞으로 3년간 상용직 1,300명과 일용직 1,800명을 발굴·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농식품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핵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핵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에는 △농식품산업 고용지원 활성화 위한 기반 구축 △비경제활동인구의 농식품산업으로의 유입 촉진 △농식품기업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취업성공금 및 도약장려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출범한 사업단은 전북에서 선정된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하에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농식품산업 일자리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사무국 2팀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전북산학융합원장이 겸임하고, 총 7명의 전담 수행인력이 운영을 맡는다.

김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가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이 글로벌 K-Pod 메가로 발돋움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 K-리그 최초 축구장 다회용기 도입

### 전북현대모터스·지속가능협회의와 친환경 프로젝트 실시 축구관람객 대상, 분리배출·다회용기 반납 이벤트 진행

전북자치도는 전북현대모터스, 전북지속가능협회의와 함께 K-리그 최초로 축구 경기장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9월 1일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경기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푸드트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마다 2천개의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약 1만 6천 개의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약 528kg 온실가스(CO2-eq)를 감축하고, 이는 나무 약 100그루를 심은 효과에 해당한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은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소비한 후, 경기장 내 16곳에 설치된 반납 부스에 용기를 반납하게 된다. 반납된 용기는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해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된다. 또한, 다회용기 반납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팬들에게는 축구 굿즈, 음료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는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관중들이 적극적으로 분리배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더욱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를 통해 친환경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발생 감소와 깨끗한 경기장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본격화

### '클라우드 전환 ISP 완료보고회' 개최... 도·시군·산하기관 등 정보시스템 디지털 전환 추진

전북자치도는 2일 전북자치도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클라우드 전환은 기존의 서버나 데이터 저장소를 물리적 장비에서 가상화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과 보안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도와 시군, 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비

용 및 이용료 산정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 신규 시스템의 구축 또는 고도화 시 클라우드 이용이 의무화된다.

전북자치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정부 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ISP를 추진했다. 앞서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시범사업

을 통해 도내 16개 기관의 313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했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 공공기관 등 72개 기관의 정보자원 운영 현황을 분석, 클라우드 전환 비용과 연간 이용료를 산출해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주목표로 삼았다.

조사 결과, 도내 행정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비율은 13%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ISP에 참여한 기관이 함께 클라우드로 전환할 경우, 공동구매 및 보안 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해 이용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완료보고회에는 전북도와 시군 정보화부서 관계자, 출자·출연기관 담당자, 협력 기업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해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ISP는 2023년에 체결된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아로리서치(주)가 참여해 도내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 가능성을 분석하고, 전북 데이터센터의 방향성과 모델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 AI 공공서비스 윤리·안전 이해도 제고 세미나

### 서비스 도입 시 대응 방안 모색

전북자치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2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시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윤리·안전성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여러 사례 등을 통해 인공지능(AI)의 윤리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도내 시군과 출연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스코비엘, 법무법인원, 한국기술시험원(KTL)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행정 실무자들이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 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강력 징수에 나선다.

도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군 광역징수반을 운영하며, 8월 중순에 임용된 채권추심 전

문가와 함께 고액 체납자의 방문, 가택 및 사무실 수색, 은닉 재산 추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재산을 압류하고,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건설기계 압류와 기타 금융재산 추적을 통해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이 해산할 경우,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동산 압류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들에게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며,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체납 세액 분납,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관허

사업의 제한 유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액 정리 보류 및 체납처분 중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무재산, 폐업, 부도 등 체납 사유를 분석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5년 이상 경과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경위, 과학치안자문단 11명 위촉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정책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위원회는 2일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과학치안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군산

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0여 개 기관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가와 전북경찰청 등 치안 현장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향후 1년 동안 전북 지역의 치안 현안 해결을 위한 과학적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과학치안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